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조회 전문가 명단>

- ▲ 고영남 - 인제대 법학 교수
- ▲ 김영삼 - 학생생활연구회 회장,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 ▲ 김영지 -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 김종서 - 배재대 법학 교수
- ▲ 김형욱 -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연구원
- ▲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연구원
- ▲ 유성상 -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 ▲ 윤완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오산 고현초등학교 교장
- ▲ 이수광 - 분당 이우고등학교 교사
- ▲ 이해원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장휘국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 ▲ 정정훈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 제평섭 -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국장, 남양주 와부초등학교 교사
- ▲ 최윤진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 허종렬 - 서울교대 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고영남	소속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대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헌법과 그 법령이 정하는 학생 인권보장원칙에 부합하고 있음. 다만, 초안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교육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시하는 교육의 접근성을 위하여, 특히 의무교육단계의 비용에서 차별이 없는 교육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 등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함. 또한 「환경권」과 관련하여 소음, 수질, 화장실, 운동장크기, 차량보다 보행로 우선, 나무 또는 숲 조성 등 구체적 조치가 보완되어야 함. 특히 그 실질적 보장이 우려되는 학생의 의사결정 혹은 선택권이라는 논리에 의하여(초안 제10조) 학습권을 구성하기보다는 강요된 학습을 금지시키는 대원칙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긍정적으로 판단함. 다만, 최근 차별 없는 무상급식 논란에서 보듯이, 초안 제22조 2항의 경우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학생인권의 원칙에 의거하여’라는 정도의 차별금지원칙이 명시되어야 함. 성적 등에 의한 학생차별 외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한 지역 내지 학교 자체의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명시되어야 함.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체벌금지 :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고려해야 함. ② 두발 길이 자유 : 두발과 관련한 학생들의 표현자유는 그 길이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음. 전반적인 두발자유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할 듯함. ③ 휴대폰 소지 허용 : 초안 제13조 제4항의 단서 가운데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를 삭제하였으면 함. 이 단서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게 됨. 아울러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단서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면 함. ④ 학내 집회 자유 : 초안 제17조 제2항 단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혹은 해당 권역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장의 부대조건부여권한을 제한하였으면 함.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 ① 학생인권자료실 혹은 인권도서관을 도교육청 수준에서 마련함. ②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교육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설정하여야 함. ③ 학교평가에 관한 초안 제37조는 제도 자체의 취지와는 별개로 경쟁과 서열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인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교육여건이 상향 평준화되지 않는 한, 이 역시 억압적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초안 제38조와 더불어 학생참여보장은 초안 가운데 가장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함. 다만, 참여위원회의 구성 가운데 남녀학생비율, 도시와 농산어촌 학생의 비율, 일반계와 전문계의 비율, 공학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비율, 초등과 중등의 비율,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등이 규칙이 아닌 ‘부속 조례’에서 명시되어야 함.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라고 생각함. 다만, ①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인권관에 따라 그 실질적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임기 역시 1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책임이 신임 교육감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인권옹호관의 임명을 독립기구로 다시 설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정함. ② 또한 선출직 교육위원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인권옹호관의 권역을 교육위원의 선거구와 다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당분간 교사의 관행적 지도방식과 충돌하겠지만 조례와 그 제도들이 연착륙한다면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지도를 포함한 권한이 지닌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관건은 교원들의 의지와 그 실천, 학생들의 자각과 지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고민이 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됨. 나쁜 규범은 활개를 치는 반면에 좋은 규범은 늘 규범에 머무는 속성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끊임없는 현실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규범이라도 고인 물처럼 썩게 마련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권력관계에 함몰된 여러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를 줄 수 있지만 학교 차원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에 다가서는 데에는 여전히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함. 무엇보다도 교원의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교사회가 법정기구로 되고 교무회의가 의결기구로 됨으로써 ‘학교에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함. 이어서 국정·검인정 교과서제도가 제한 내지 폐지되는 등 국가권력과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원의 역할과 책임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의 수가 현저히 축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학교들이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조례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에 민감한 듯함. 오히려 조례의 주체는 학생이 결코 미숙아가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함. 보호자의 역할은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교육소비자라는 개념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초안 제32조 제1항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봄.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① 제2조상 “학생”의 개념에 퇴학처분을 다투는 고등학생도 포함되어야 함. ② 그 운용상의 합리성과는 별개로 상벌제 내지 그린마일리지제도(초안 제26조 제3항)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상벌제는 학생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수동적이고 타율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이미 학생인권조례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함. ③ 초안 제15조 제3항은 교사의 평가권과 충돌할 수 있음. ④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前文을 두었으면 함. ⑤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초안 제38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김영삼	소속 :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수준을 학교(제도)나 교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일정정도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서로간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분,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의 구체성에서 일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학생이 아닌 자기 권리 실현의 주인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강조가 더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 보장되는 학생인권 내용도 당사자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없을 경우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 및 참여의 권리는 그동안도 원칙적인 수준의 제안은 많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치기구의 독립적 구성과 활동 보장 등의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자치기구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학교에서 학생 자치기구가 가지는 대내외적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학칙 재결정이나 정책결정 참여라는 다소 추상적인 역할도 중요하나 학생자치기구의 일상적 활동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상이 분명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학생자치기구와의 관계성, 또는 학운위가 연 8회 이상 열려야 하듯이 자치기구의 논의(회의) 활동의 횟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한다. 초·중·등 교육법에 학운위 관련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듯이 학생 자치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나열될 수 있었으면 한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

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차별금지의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을 알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도 교사나 학교로부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소수자들이 학생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게되는 인권유린 문제 역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의 우선요구 학생인권 과제에 여전히 두발, 복장, 체벌 금지 등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10년 20년 전에도 학생들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 상식 수준의 발전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을 하면서 미래에 전혀 의미가 없어질 두발, 복장, 체벌 등의 규제를 짊어지고 가게하는 교육현실에서 이미 우리의 미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사회의 익숙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두발, 복장, 체벌 문제를 짊어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단계적으로 시작된 주 5일제 수업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정확히 우리 교육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혼란입니다.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 혼란이 걱정되어 기본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체벌을 통한 순응, 상급학교 입시와 관련한 협박(?) 등 학교 운영의 기본 질서를 잡아주었던 비정상적인 기준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 때 새로운 질서 마련을 위한 노력이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여전히 과거에 잡아두지 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 덧붙입니다. 우선 휴대전화 관련 내용은 체벌, 두발 자유, 집회 허용 등과는 약간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중독을 치료의 대상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듯, 요즘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는 인터넷보다 더한 중독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이 점에서 교사들,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벌, 두발 자유, 집회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된 후 나타날 혼란은 많은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곧 착수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은 교육감 위촉 20명을 제외하고 80명의 위원 선정 방법에서 지역별, 학교급별 비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뒤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생 자치기구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 학생자치기구 → (지역교육청)학생참여위원회→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이들 기구들은 상하 관계가 아닌 네트워크와 수평적 역할 나눔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인권 증진의 주체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의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에도 교육부는 두발, 복장, 생활지도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만 하면 '이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학교 자율권에 속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똑같은 발언권을 보장받는 논의는 진행될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단지 이야기할 기회가 주었다는 것 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학생의견 반영은 단발적인 의견제시의 기회 마련이 아닌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주, 의견제시의 방법, 학생들의 의견이 갖는 규정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었을 때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조직과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있어왔던 조직이나 구조가 왜 기능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5인 이내의 상임 위원과 가능한 여러 명의 비상임위원(현장 교원, 지역사회활동가, 인권 운동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별로 학생수 몇 명 당 한 명의 원칙으로)을 두어 학생인권옹호관 활동이 현장과 접맥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육청 학생인권상담실 운영은 제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 현재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이용률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상담센터에 학생인권담당자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인권옹호관이 현장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옹호 활동이 현장에게 가장 좋은 인권교육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장이 모두 옹호관의 감시와 시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옹호관의 일상적 활동은 인권 의식과 실천의 증진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 권리 구제의 실효성 역시 현장과의 일상적인 관계 맺음의 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례 초안은 학생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방종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교육(특별히 생활지도)의 포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전히 교육을 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한다고 해도 교육은 계획되고 의도된 조직화된 활동이라는 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업이나 숙제 등에서 일종의 강제력이 동원된다. 많은 경우 체벌은 교육활동 중 교사가 요구하는 교육적 강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재반응적 성격이 깊다. 따라서 체벌 금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벌유발 요인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 초안은 그동안 침해받고 있었던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권리의 보장과 의무의 이행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권리 못지않게 이행해야할 의무에 대한 것 역시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헌장을 참고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생 지도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교사나 학교의 자의적 생활지도에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 즉 두발의 길어도 담임교사와 학생부장 선생님의 기준이 달라 누구는 용인하고 누구는 적발하는 상황이 학생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학급 담임 교사끼리도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자의적 생활지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야단과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여러 부분을, 지도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정교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이나 교사의 우발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조차도 제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지각을 했을때는 방과 후에 1시간 남아서 교육활동을 해야하고, 두 번째 지각을 했을때는 방과 후에 2시간 남아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세 번째 지각을 했을때는 상담교사와 면담해야하고, 네 번째 지각을 했을때는 학부모가 학교에 내방해야 하고... 지각 때문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학생이 보장받아야할 권리 만큼이나 학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 헌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소년헌장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 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학생 인권 문제는 생활지도와 교과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상황은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 동료 간의 관계 맺음과 상호 인권 존중에 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교사가 개입하기 이전에 학생들 간에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권한, 교사의 자기 권한 실현 방식, 갈등 상황 대처 방안의 체계화, 유형화, 차별없는 생활지도의 새로운 틀 마련과 운영에서의 교감, 교장의 역할, 학교 조직의 재구성 등 학교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항들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나(학생)에게 보장된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교사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에서 동료 학생 혹은 교사와 상호 어떤 책임과 의무를 나눠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징계절차에서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교사들에게도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들과의 불미스런 갈등과 관련해서 상황에 대한 진술, 교육적 후속 조치에 대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청원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수의 교사가 다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점검할 수도 없다. 장소(공간)와 시간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행동이 규정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규칙이 학생들 상화간의 노력으로 정착,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휴식시간이나 점심 시간, 교실과 학교의 특정 장소(도서관, 음악실....)는 쉼과 휴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고, 수다와 장난은 복도와 학생휴게실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학급의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사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학생간, 교사-학생간 관계의 파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성 회복이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공간에 대한 개입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휴식 시간, 교사들은 모두 교무실에 모여있고(초등은 제외하고 중등 학교만의 상황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공간에서 마음껏 활개치는 몇몇 친구들의 횡포(?)에 그냥 주눅들어가 있게 된다. 교사들의 업무 공간(사무실) 배치 혹은 교과교실제의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이 공간적으로 학교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시간들이 확보된다면 학교 폭력의 예방이나 대처에 있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학교가 공간적 측면에서 방치되지 않는다면 면학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해 조례안 내용을 전달 받은 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이 조

레안이 학생들을 방치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현실은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적 개방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선생님들조차 체벌 금지, 두발 자유 등에 대해 왜 방어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논란’은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책,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쟁’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난장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국회조차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저 뻔히 얘기될 수 있는 수준의 ‘우려’를 반복하는 것으로 ‘논란’만 이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으로 남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중요한 원안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막막한 상황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쟁이 필요합니다. 논쟁한 만큼 발전합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논쟁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용기가 우리사회 학교 교육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학생 인권 담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치도록 논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김영지	소속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함.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대체로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함.

○지엽적인 의견

-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은 제22조(교육환경권)에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조례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환경을 담는 문구로 보완하면 좋을 듯함.
- 제11조(휴식권)의 조항명칭을 상위범주인 '교육받을 권리'의 하위조항 명칭으로 더 적절하게 하는 대안은 없을까? 조항명칭으로만 보면 건강권 분야의 내용으로 보임
- 제24조 '학교급식권' 더 적절한 용어는? 학교급식권은 보통 학교급식을 책임/납품하는 권리 개념으로 많이 인식되는 듯 함
-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실천계획의 목표라 할 수 있는 ①의 문구를('.....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표내용으로 보완
- 제36조 학생참여위원회 선발방식을 공개모집 학생 중 '추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듯. 세부 구성방법은 추후 규칙으로 정하거나...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관련 조항에 소수자에 대한 우선배려 내용을 넣은 것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단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봄. 필요성과 논리는 10문 10답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두발 길이나 휴대폰 소지 건은 조례에 직접 언급하기에 작은 사안일 수도 있으나 19조 절차 준수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조항으로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임. 중요한 것은 이들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관건이라고 생각됨.

- 학교평가 시 개선조치 뿐 아니라 모범사례 공포,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 인권친화학교 선정·발표, 인권상 수상 등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한 사항임.

청소년분야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 구성·운영 등의 노력이 있어왔는데 이들 활동과 위상에 대해 부정적·회의적 평가도 있었으나 청소년의 참여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함.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임.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아동청소년권리옹부즈만제도의 교육분야 도입이라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임.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위상이 인권조례 실행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함. 인권옹부즈만이 가져야 할 권한,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인권옹호관, 인권상담실 직원 등을 인권마인드와 인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구성하는 것이 핵심

- 행·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었는가? 또는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가?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0문 10답에 필요 논리가 매우 잘 정리된 듯함.

- 인권조례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저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유엔권고 등을 들어 설득작업

※ 10여년 전 학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불온?문서로 인식된 적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 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듯함.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신문기사 : 1998년도에는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는 분위기여서 서울 K중학교 이아무개(34) 교사는 89년 유엔이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수업교재로 삼았다가 교감에게 호된 질책을 들었다. 교감은 “불온문서의 출처가 어디냐”고 다그쳤다. 도덕을 가르치는 이 교사는 “이 협약은 유엔이 제정한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홍보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8. 12. 10)

* 몇 개 조항에 ‘... 교육적 목적...’이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권충돌 사안 발생 시 ‘교육적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가 더 쟁점이 될 수도 있음.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요.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인권신장을 위한 방안은 그 동안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제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듯함

- 정부발표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인권활동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 이 조례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교육’분야만이지만 학생인권은 학생이 일상적 생활을 해나가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침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가 개선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가 중요함

-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동참 차원에서 경기도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인권조례 홍보. 기회가 되면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도시 담당자와 교류, 사례 나누기와 홍보 협력하는 것도 좋을 듯

※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가지 원칙 (김영지) pdf 파일 첨부(36쪽 참고) : 두 번째 원칙에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국가와 지역당국은 관할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해야 하며 협약의 주요원칙이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현장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만큼 최대한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할 듯함. 조례 제정과정 자체가 중요한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 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을수록 희망적이라 생각됨.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의미있는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김중서	소속 : 배재대학교 법학과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조례 초안의 권리 보장 수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에서 천명된 원칙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헌법의 다양한 기본적 인권 보장 원칙들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권리들을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추가하고 있어서 학생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권리 목록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교사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조례 초안은 제6조(차별금지)와 제9조(학습권), 제21조(복지권) 등을 통하여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6조와 제9조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데 비하여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제21조의 소수자 배려를 위한 예산 등 자원배정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관철할 방법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그것이 조례의 수준에서 가능해 보이지도 않음)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됨.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사안들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의 학생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철저하게 훈육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인다. 즉 학생을 인격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파악한 결과 명목상으로는 학생의 보호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규제, 억압하는 일들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사실 이 조례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벌 금지 등등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학생에 대한 폭력을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마치 체벌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될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지극히 반인권적인 것이다. 체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인권친화적일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권리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에게만은 부정하고자 하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권리들은 여러 나라들에서(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조차도)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학교별 평가의 경우에는 그 기준 등이 교육감의 지침에 맡겨져 있으나, 구체적 실행절차에 대한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는 학생의 참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제5절의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 체벌의 금지 등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참여권만을 인정하고 다른 권리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될 우려가 크다. 체벌 금지나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논의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수의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는데 각 인권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인권옹호관들의 협의체가 있는 것인지 등의 사항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독자적 활동의 원칙을 채택한다면, 예컨대 관할 지역이 서로 다른 인권옹호관들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사안을 합의제로 할 경우 관할지역을 두는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옹호관들이 관할지역에서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례안이 반교육적이라는 의견은 일방적인 교육철학의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학생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철학이 아니고서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교육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의 모색을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다른 이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한국사회에서

간과되어 왔던 민주적 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요.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첫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학내구제절차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점은 조례안에도 대강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인권옹호관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와 상담을 해 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의 인권 목록은 갖추어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한 사유를 정하거나 또는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 거쳐야 할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체벌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중한 성과로 생각됨. 이러한 조례제정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법률의 차원에서도 제정되기를 바란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김 형 욱	소속 :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연구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 현황을 바탕으로 헌법 및 국제인권 수준에 맞게 조문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서 '학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정의에 따라, 학생소수자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적용가능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이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 ☞ 차별과 관련하여 제6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견'보다는 그냥 '의견'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

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지금까지 핵심쟁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을 배제한 사회와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행해져 왔습니다. 체벌금지 및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발 길이, 휴대폰 소지는 규제의 유/무가 아닌,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안 제19조의 절차가 있기에 학생의 의견존중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사회가 위의 학생인권 사항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어른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권리보장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적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으며 인간답게 자기실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학생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또는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학교나 교사, 어른들이 학생의 의견이나 행동이 제멋대로인지 아니면 인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려는 적극적인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학생에게 자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사회가 학생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제약한다면 언제까지나 학생은 인권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 할 것입니다.

- ☞ 두발자유화와 관련해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염색하고자 하는 자기표현은 어른사회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 안으로 들어 왔을 때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교칙으로 두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발규정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두발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하려는 책임을 학교나 교사, 어른들은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강제·통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학생에게 인권·권리에 대해 배울 기회를 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 중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 인권교육과 홍보와 관련해서입니다. 제30조에 '교육용 교재발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2조의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부담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조문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 교육은 제29조의 홍보에서 강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9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조례 자체에 대한 홍보가 중점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배경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연관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교육행정직, 학교관리직, 교사연수 및 학생인권교육을 통하여 조례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제29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 실태조사 및 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실천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분석결과는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당국의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초한 실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3조 ①은 '교육감은 3년 마다 경기도내……'로, 제34조 ②는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인권향상을 위해……'로 수정하는 어떨까합니다.
-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학생이 자신과 관련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신장과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현방법이 반드시 직접적인 참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형식적인 참여로 끝날 우려도 있으며, 학생을 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려, 진행방식,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의위원회에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직접참여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견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과 대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과 심의위원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학교별 평가와 관련해서입니다. 학교나 교사의 행정적 부담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평가지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면

중전과 다를 바 없는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조례제정 이후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행정 일환으로 실시되고, 지역교육청 연수 등을 통하여 계몽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7조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보장은 다른 제 규정의 성실히행과 학생인권옹호관을 중심으로 한 인권상담과 구제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참여 규정은 구체적이고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참여가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실천노력입니다. 따라서 제36조는 설치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감은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조례가 채택된 이후에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활동공간 마련 등 구체적인 시책의 법적근거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학생참여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참여위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제36조 ④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체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모든 상담과 구제는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의 역량과 향후 관리차원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번에서 언급한 '단위학교의 학생상담 기능 강화'를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행정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4조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옹호관과 관련해서입니다. (제39조에서 46조를 포괄적으로 검토)

- ① 제39조에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의 소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부속기관'으로 하는 등입니다. 부속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인 활동은 침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 ②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의 옹호관 '해촉'의 규정이 없습니다.
- ③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④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기발의에 의한 조사', 즉 '직권조사' 권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연간 활동을 담은 '연간(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직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⑥ 제39조 3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일부임으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⑦ 옹호관 인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상임 옹호관 중 1인을 대표 옹호관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⑧ 제4장의 제목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로 하고, 제1절과 제2절로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오히려 교사의 학생지도를 불가능하게 하고, 교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지금의 반인권적인 교육현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가 진정한 지도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고 참여가 활성화되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학교분위기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는 선진사례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안의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학교교육이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과 교사와 학생간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례는 이와 같은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반교육적'인 문제가 아닌 진정한 교육의 실천입니다.

☞ 조례를 통하여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의식을 높이고 권리실현의 방법을 체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교육실천과 방법을 요구합니다. 관련된 교육실천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공유가 절실할 것입니다.

- ☞ 조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행사의 원칙입니다. 학교문화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은 인권감수성을 체득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존중을 인식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권리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권리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 스스로가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책임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요.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 교과외 활동에 대한 학생참여 활성화: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습활동과 병행하여 교과외 활동에 대한 주도권을 학생에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학급·학년단위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학생인권의 관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 학교 내 상담기능 강화 방안: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담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안심하고 상담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얼마나 될까요? 조례안의 학생인권옹호관이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학생의 SOS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학교기능도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상담교사 운영의 한계는 현재 학교나 교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예산 확보가 절실할 때입니다. 학생은 슬프거나 괴로울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여부의 판별과 대처는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 조례안 자체는 학생인권을 홍보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개별조문은 충실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생인권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전문의 부재입니다. 일반 행정조례의 대부분이 전문이 없지만, 학생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조례제정의 배경과 의의 등) 으로 전문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니면 제3조를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을 ‘학생의 인권존중 또는 보장’으로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조례의 내용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 ☞ 조례제정에 있어 이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교육행정당국으로서의 애로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시민, 학생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념과 원칙은 변하지 않더라도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절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념과 원칙이 확고하다면 실행방법이 조금 덜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제정 후 교육감과 행정당국의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제정이 되고 행정지침 등으로 학교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그리고 조례는 제도권 안의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문제도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학생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관계자 등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이하,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명칭입니다. 조문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명칭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입니다.
 - ② 제23조를 ‘놀이 및 문화적활동에 관한 권리’로 하고 내용도 단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 ③ 각조의 괄호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권리’ 등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 ④ 제19조 2는, ‘학생은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하여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라 고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으로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 ⑤ 제20조의 5는 ‘……사항을 결정할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⑥ 제25조의 3은 보건실과 함께 ‘보건교사’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⑦ 제26조 2는 ‘회복’ 보다는 ‘심신회복’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⑧ 제9절의 제목은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류은숙	소속 : 인권연구소 '창'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조례의 성격상 당면한 문제들(체벌 등)에 집중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로 꼽힌 것은 그동안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들로서 유엔 등 국내외 인권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것에 국한돼 있습니다. 당장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인 건 당연하지만 학생 인권의 범위를 너무 제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당장 침해가 심각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강조하되, 인권의 '보호·보장·실현'이라는 목적에 맞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생명·안전·신체의 자유'라고 분류되는 항목의 인권기준에서 이 조례에는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특정돼 있습니다.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현 실정상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할 학생인권문제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직접 서술하기 전에 대전제가 되는 '생명·안전·신체의 자유'에 대한 일반원칙을 간략하게 서술해둔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권리 문제가 왜 학생인권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이후 권리를 확장하여 해석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권리항목들도 일종의 '대문'이 되는 조항을 중간 중간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가지 범주의 권리 목록을 서술하기 전에 '대문'이 되는 '일반' 조항을 만들어 삽입했으면 합니다. 권리 목록을 늘리자면 늘릴 것이 정말 많은데 당면한 현안에 우선성을 부여한 것이 이 조례의 성격이니 권리 항목을 더 늘리는 대신에 대전제가 되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조례 초안의 3가지 범주는 국제아동권리원칙인 3P(protection, participation, provision)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P에 대한 일반원칙

을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차별금지 원칙인 6조 말고는 조례에서 차별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합니다. 제9조 3항(학습권 보장), 제21조 2항과 4항(교육복지에 대한 권리)말고는 권리 약소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된 바 없습니다. 각 조마다 구체적인 차별방지책이 언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 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신체적·인종적·성적 특성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폭력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거나, 제9조(학습권)에서 '신체적·인종적·성적 특성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교재나 사례 사용은 안된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소풍, 야외학습 등)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서 '학생회 구성은 성별 및 약소자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청구권)에는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는 식으로 구체적인 차별금지조치를 삽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제 6조에서 '본 조항(차별받지 않을 권리)은 이 조례의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적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더하기' 인권은 가능해도 '빼기'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총체성'을 특성으로 하기에 어느 부분의 인권을 빼면 다른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체벌금지, 두발길이 자유 등을 빼면 이미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그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기본중의 기본인 인권입니다. 이것을 빼고 무슨 인권을 논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어떤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강제로 금지될 때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모'를 함으로써 금지하는 권위를 조롱하게 됩니다. 가령 휴대폰 소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열차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몰상식적인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자제를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른들의 휴대폰을 압수할 것을 규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 또는 압수하는 강제가 계속 작동할 때 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체가 요청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모’하여 금지하는 권위를 ‘조롱’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수 등의 금지는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것이 인권이라는 전제와 대립합니다.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줘도 그것은 인간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노예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에게는 자율성이 인정되거나 존중될 수 없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 사이에서만 서로간의 의무와 예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단순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자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학생이라 불리는 인간에 대해 도대체 어떤 점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휴대폰 사용마저 자율에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너희 학생을 조금도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학내 집회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없이 인간의 생활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일부 집회와 결사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복지를 고려치 않는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집회와 결사를 봉쇄해서는 인간 생활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복지를 고려치 않는 집회와 결사는 그 성격 자체로 인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종교활동도 경제활동도 교육활동도 다 집회와 결사의 표현양식입니다. 교회도 사찰도 경영자모임도 노조도 학교도 다 집회와 결사를 통해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이 주재하는 조회나 1년에 한 두 차례의 축제 말고 지금 우리의 학교에는 너무 집회와 결사가 없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학생조회, 다양한 학내외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학생총회 등 이런 저런 형식과 내용으로 모이고 얘기하고 때론 대립하고 화해하는 것이 인간생활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진짜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 애국조회만을 봐온 저는 외국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조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도 그냥 조회의 참가자였고, 그날 조회의 담당 동아리가 나와서 사회와 진행과 의제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다 그 진행에 똑같이 따랐습니다. 제가 참관한 그날 조회는 학내 인권동아리가 주관한 조회였습니다. 외부의 인권단체 인권교육 담당자를 초청하여 얘기를 듣고, 동아리 대표가 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아리 회원 전원이 나와서 밴드 연주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심수들에게 편지를 같이 쓰자는 제안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날 하신 일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회의 진행은 00 동아리가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전부인 인사말과 초청손님인 저와 제 동료에게 커피를 타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허용하고 금지하고 여부를 떠나서 생각과 행동의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행사할 수 있

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금지를 해도 모일만한 이유가 있으면 모이는 것이고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열리는 것이 집회와 결사입니다. 설령 반대 여론에 밀려서 이 조례에서 이 권리를 금지하거나 이 권리를 삭제한다고 해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인권의 존재 자체에는 손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실천계획 수립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해마다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지, 5개년 계획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여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흔히 학생을 참여시킨다고 말할 때 의견수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참여는 학생의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 방안만이 아니라 참여의 결과(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에 대한 확인과 보고도 넣었으면 합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이 기구가 여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이용하는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되는 것이 실효성의 첫걸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당사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문제들이 조례에서 강조되는 것이 권리구제기구의 상과 운영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폭력에 기초한 지도는 교육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체벌을 안하고 차별을 안하는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은 학생인권만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전체와 사회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인권은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약한 자의 권리입니다. 현 학교 체계에서 강자와 약자를 굳이 가르치면 교사는 강자이고 학생은 약자입니다. 약자를 상대로 강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굳이 가르치면 학교 운영자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운영자가 강자이고 교사가 약자일 때가 많습니다. 교권이란 이런 관계속에서 주장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을 상대로 주장할 것이 교권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사의 지도할 권리를 위협하는 체계나 교육을 왜곡하려는 상업적·경쟁적인 사회 환경을 상대로 주장돼야 할 권리입니다. 학교 체계 속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게 되면 교사 등 다른 구성원의 권리가 위축·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구성원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고양되게 됩니다. 가장 약자인 학생이 존중되는 환경이라면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는 볼 것도 없을 테니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차별주의자는 성평등 때문에 불편해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비폭력 때문에 불편해지고, 언어폭력을 해대던 사람은 말하기가 불편해집니다. 혼자서 결정하던 사람은 협의를 하게되면 불편해집니다.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늘리는 것이 인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런 불편함의 증가를 교권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는 교사가 진정 행복한 교사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초안에는 사실 창피한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때리지 말자, 머리 함부로 자르지 말자 등이 인권기준에 담긴다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 담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런 기준을 언급해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권의 수치 아

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런 구시대적 인권침해를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의 증진이 될 것 이라 여겨집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인권을 옹호하는 모범사례의 발굴과 소개; 인권침해 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도 소개돼야겠지만 학생동료간에, 학생과 교사간에, 학교구성원간에 인권을 옹호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발굴·소개하는 게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발굴·소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실에 장애학생(장애의 양상도 다양합니다)에 있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뇨 등 특정 질병을 가진 학생이 질병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별적인 언사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인권침해 시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Q&A 형식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의 대원칙은 있는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굴·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동료간의 지지(peer support)가 중요합니다. 학생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쓴 문집 등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 자신들끼리 어떤 행동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혹은 지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 학교 환경에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기
- 학생 인권보고서의 정기적 발간 및 보고서에 기초한 협의
- 학교 환경에서 무분별한 상업홍보와 부적절한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추방하기(예를 들어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를 부추기거나 특정 브랜드의 소비를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라는 식의 광고)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학교폭력(교사에 의한 것이든 학생간에 벌어지는 것이든)으로부터의 안전이 보호자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에 관심이 많을 듯 한데(예를 들어 교사폭력에 대한 진정시 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가해학생

이든 피해학생이든 이후의 삶의 회복에 대한 문제 등), 조례에 이런 부분이 언급됐으면 합니다. 진정사실의 비밀유지, 구체적으로 취한 후속조치의 통보의무,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마련, 폭력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 등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1. 조례의 의의와 목적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조례가 국내외 인권기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전문' 형식에 담으면 어떨까요? 조례가 널리 알려지고 읽혀지는 것 자체가 인권교육의 출발점이 될 텐데 조례라는 형식이 그런 가독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전문'을 덧붙임으로써 일정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2항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에서 ‘비례원칙’의 의미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 제4조 3항의 “교사 등 타인의 인권”에서 ‘교사’를 굳이 특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타인의 인권’이면 충분합니다.

- 제4조 책무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의 보호자·후견자의 책무도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제8조 2항에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뒷부분의 “피해의 확대를 방지”와 연결되는 ‘안전사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 제 3절의 제목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 되어 있는데, ‘교육권’또는 ‘교육에 대한 권리’로 했으면 합니다. 인권에서 교육권의 의미는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란 상호적이고 서로 배우는 과정인데 교육을 ‘받을’ 이란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9조의 ‘학습권’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권’자를 붙이려면 사회적·법적으로 뭔가 공유된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할 텐데 ‘학습권’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공유된 개념을 확보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이 단어를 쓰려면 이 조례에서의 학습권의 의미를 앞부분에 정의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9조 2항에서 ‘교내·외 행사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참석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교내·외 행사참석’뒤에 ‘강요’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 제 11조 휴식권의 의미가 소극적입니다. 휴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학습강요만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학생 자신의 연령과 취미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것의 향유를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교육활동’이란 그 의미가 본래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휴식권을 저해하는 부정적 의미의 활동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 강제자율

학습 등을 지칭하고자 한다는 것을 현 상황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는 하나 ‘교육활동’이란 단어 말고 다른 표현을 고민해야 할 듯 싶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유성상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권리를 단순히 누리도록 내용을 목록화 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교육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거의 모든 학생인권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사실 인권조례가 확정되어 학교수준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로서 수정하거나 보완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제시된 소수자들의 목록이 조례안에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혼란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채 자리잡

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데서 오는 혼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이라는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지위를 인간의 존엄성에 앞세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학생들의 미성숙성을 앞세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교육이 붕괴할 것이라 염려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기존 권력 집단의 소심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은 인간으로서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교과지식만으로는 익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인권조례(안)은 교육적으로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도록 하는 첫걸음이며,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얻기 위해 판단받아 오던 성숙과 미성숙의 구분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전반적으로 충분한 내용이라 보여지지만, 단 한가지, 학교별 평가 항목은 그 효용성 및 결과의 효과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별 평가의 결과가 학생인권의 증진을 가져올이지, 아니면 보다 암묵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권력관계를 강화할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 인권을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제정하고, 관리하고,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록화된 '한다' '안한다' 등의 학생인권 내용보다 적극적인 실천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술한 기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및 인권의식의 고양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의 권리를 구체하기 위한 외부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 입학사정관의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의 역량에 따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좁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보직정도로 생각하거나 실질적인 중재역할 대신에 사사건건 단위학교의 특정 업무를 간섭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지위라는 점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중립적인 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호 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0문 10답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반교육적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교육적이라는 말을 하기위해서는 ‘교육적’이라는 표현이 갖는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교육적 혹은 비교육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 어떤 단체, 집단, 언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권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권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선행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적 존엄성을 해하면서까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보면, 쟁점이라고까지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중적인 언론을 통해 대량 전달, 유통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요.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적절하게 지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교육의 문제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듯, 학생인권의 문제 또한 두 교육주체의 관계를 보다 인간권리 측면에서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교원들이 안전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원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들의 안전과 위기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교사들도 학교와 교육행정 체제에서 공평한 인간의 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억압받는 자, 교사를 억압하는 자라는 이분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제정이 마치 억압받는자가 억압하는 자를 상대로 벌이는 혁명정도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현재의 인식구조를 변경하여 교사 또한 억압받는자들로 그들의 인간적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학습의 권리, 그리고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학생(아동)의 안전과 학업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생의 안전을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전제임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본 조례안은 이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요한 이슈가 '면학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되겠지요. 그러나 본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인권을 누리고 보장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결코 낮지 않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연구가 몇몇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과 학습태도,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계획하고, 실천한 경우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온 사례들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아동'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키워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큰 말뚝을 박아 끈으로 동여매 놓고 그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듯한 형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마음과 지적 성장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리 강하지 않은 외부 환경적 변화, 어려움 속에서 쉬 낙담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자율적인 판단을 지닌 성숙한 인간입니다. 언제부터냐구요? 그것은 적어도 한 아동이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이전부터입니다. 이는 모든 아동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또 지켜내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나약하며, 인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인식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답변된 내용이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인권은 어느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키워지고, 또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로 교육적인 것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윤완	소속 : 오산고현초등학교 교장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조례 초안은 학생 권리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고 본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조례 초안의 차별금지의 원칙은 긍정적으로 본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시간 이외에 평화로운 집회 참여 권리, 교육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결사권, 학칙 등 규정 제·개정과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은 문제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지만 결사권, 집회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면 공교육 현장은 학생 지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초·중·고교 학생은 엄연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동시에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교육·훈육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두발 길이 자유, 교복의 자유로운 착용, 휴대전화 소지 허용,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자율적 선택,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서약서 거부, 수업시간 외 자유로운 집회 허용 등은 학생의 훈육, 지도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모든 자율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복 자율화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을 초래할 것이며, 두발길이 및 두발자율화는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미성숙 학생들로 하여금 개성 존중차원을 떠난 몰개성적 통제 불능의 상태를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대체로 학생인권의 증진의 기구 설치에 대해 긍정적이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참여위원회, 학생 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학생들의 무분별한 또는 편향적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는 의견을 중재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나, 이보다 전제해야 할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수정과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두발 자유, 수업외 집회의 자유, 교복의 자율화,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제출 금지 등은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은 학부모와의 협의체(운영위원회)에 의한 자율적 결정 사항이므로 일률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에서 학생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은 마땅하나, 어디까지나 미성숙의 인격체이므로, 학생들은 사회 또는 학교, 가정에서 보호되고 훈육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자율 및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 본분으로서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 부여와 피교육대상자로서의 학교에 의한 교육과 훈육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균형적 시각의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
1. ‘학교 규칙’ 제정의 실질적 위상 정립과 법제화
 2. 학교내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교육차원의 가칭 ‘학교 내 학교-학생간 갈등 문제 해소 위원회’의 설치
 3. 권위적, 과도한 학생 체벌 및 규제에 대한 학부모, 학교간 협의 구성체 구성 유도
 4. 학생 인권보장에 따른 학생 본연의 책임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으로서의 생활 태도 규범집’의 표준화 메뉴얼 보급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학생 폭력, 학습분위기 저해 학생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학부모 의무 상담제 도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지도 외 학생들의 집회 허용’은 자칫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학생들에게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한 편향적 정치성을 심어줄 수 있어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조례를 제정에 앞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학생 신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도 함께 키워줄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수단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인권조례까지 시행할 경우 자칫 학내 문제 해결은 학생 교육의 최후 보루인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학생인권조례 규정보다는 먼저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흡연·음주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에의 불복과 도전, 학생 폭력, 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적 측면과 학교 교육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학생의 교육적 사고가 소통되는 균형적 인권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더불어 교권보호 및 교수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이 수 광	소속 : 이우고등학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조례 초안의 학생권리 보장 정도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임. 무엇보다도 사회일반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학생 권리 목록의 범주는 타당함, 그리고 이 범주 속에 있는 각각의 권리 목록의 내용도 대체적 합당함.

☞ 그럼에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 각 조문의 논리성, 명확성, 간결성, 체계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예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에게**)라는 말은 동어반복이 아닌가? 삭제해도 무방할듯

→ '학생의 인권'을 '학생인권'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어차피 삭제된 것이니, 굳이 '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로 할 필요가 있나? 다음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제한의 근거', '제한의 한계', 그리고 '학교의 책임' 내용 순으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학교규정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

④ 학교는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조문을 다듬어야 할 곳이 더러 있다.

2) 제3절 '교육받을 권리' 제9조(학습권)에 내용추가 필요

- 학생입장에서 배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다.

② 학생은 교육과정안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교육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다.

- 위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초안의 3항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학생'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학교는 다양한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학생,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제7절 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내용의 명확한 구분필요

- 교육복지는 크게 '학습복지'와 '생활복지'를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복지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두 가지 내용이 혼합된 느낌임.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함.

- '학습복지' -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돌봄
- '생활복지' -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행정적 배려
- 다음항을 추가하면 어떨까?

학교와 교육감은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조례초안은 학생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경제·사회적 처지와는 무관한 '학습곤란학생' 또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권신장 규정도 명확했으면 좋겠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핵심쟁점에 대한 소견

1. 체벌 금지

-환영하는 규정이다. 체벌하는 조건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되기 어렵다. 학생들의 교권침해를 염려하지만, 이 규정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는 학생들의 일상규범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가능한 조건인 만큼 학생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일상규범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바로 중요한 배움이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존재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각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두발길이 자유

-체벌금지와 같은 맥락에서 환영하고, 지켜야할 규정이라 생각한다.

3.휴대폰 소지 허용

-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의 한계를 학생자치규정으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교사와 학생들간의 '수업협약'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경우, 학생들과의 약속 중 '수업이 시작되면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다'로 정했다.

4. 수업시간외 학내 집회의 자유

-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규정이다. '집회 자유 행사 경험' 역시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자 자율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간에 쟁점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만큼, 일부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학생집단내에도 긴장과 균형의 힘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학생인권 증진 방안, 참 좋다. 초안대로 된다면 학교문화의 미래지향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1.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초안 좋다. 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학생자치기구에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권', '학생자치 예산의 편성·결산권' 및 '학교규정 개정요구권'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면 어떨까 싶다.

-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참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적극적 참여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효과도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조례 초안이 수정되지 않길 바람. 문제는 교육관료나 일선 학교현장 관리자 등의 외적 감시에 대한 불편함을 불식시키는 것임.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관료, 학교 관리자의 상보적 관계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이 필요할 것임. 이를 공청회나 해석 자료에서 소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사가 모든 학생의 일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반교육이고,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허용조치는 그 자체로 ‘자율하는 인간의 육성’ 및 자율적인 학생문화의 토대가 된다.

또한 교사들에게 부여된 전통적 권위는 이미 탈각된 지 오래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리더십 형성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교사리더십은 학생들과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학생들의 삶의 지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이 시대에 적합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지가 전제조건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옹호하는 선행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교사입장에서 볼때, 학생인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참조체제(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사례)가 부족하다. 즉 몇몇 개별 인권프로그램은 많지만, 인권맥락에서 학교운영 구조 전반을 재구조화한 학교 사례가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전통적인 학교운영 논리로만 인권조례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운영 모델(실제운영 사례-대안학교 혹은 실제 인권친화적인 일반학교)을 소개하고, 운영 모형을 구조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친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사업이나 정책연구학교 사업으로 진행해 볼만하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공부'에 대한 재개념화, 공부 잘할 수 있는 조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내용 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학부모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실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설득력이 있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이 종합될 때, 학부모들은 인권친화적 학교가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학교문화 견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공청화와 토론회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학습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이해원	소속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권리의 보장 수준은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4원칙(무차별, 18세 미만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보호·발달보장, 참여보장)에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조례 초안은 학생의 권리를 크게 세 가지 권리, 즉 자유·참여권, 복지권, 안전권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하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발달단계별 과업에 근거하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내용 상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초안도 학생의 발달단계상 주요 발달과업에 초점을 두고 특히 자유·참여권(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에 해당)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학생의 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호권에 해당)과 복지권(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과 발달권에 해당)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정,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이 규정하는 복지권의 복지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복지로 제한된 복지 개념을 보다 통합적으로 학생과 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개념으로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학생의 복지권은 학생의 생존권과 신체·심리·사회적 발달권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 됩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바로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 초안이 규정하는 복지권의 복지 개념이 교육복지만이 아닌 보다 통합적으로 소수자 학생과 해당 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복지개념으로 확대되어 학생의 생존권과 신체·심리·사회적 발달권을 포괄한다면, 우리사회 소수자 학생들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영아의 해외입양을 막고, 시설보호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만(타이완)과 같이 청소년미혼모(학생미혼모)의 학습권과 복지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거센 반대 여론 등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여도 일관된 원칙(특히 학생의 참여보장)에 근거하여 설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특별히 더 이상 보완 또는 수정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인권옹호위원회(가칭) 또는 아동전문법률지원단 등과 연계되어 네트워킹하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일회성 이벤트로 제한되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인권옹호관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인권옹호위원회(가칭: 일본의 사례 참조), 민간 아동전문법률지원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옹호국(가칭) 등과 연계되어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특히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교사와 학생은 모두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 것이 아닌지요? 다만 그들의 권한과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요.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특히 교과목과 연계된 다양하고 심화된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개발되고 수행되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때 교사와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교사와 부모 대상 학생인권교육(현재 민간차원에서 어린이재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지역사회 아동권리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면, 조례 초안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기타 지엽적인 제안:

-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줄여 표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 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21조에서 '상담조력'을 지원(보다 포괄적 의미)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이 맞는 표현인가요? 개발·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장 휘 국	소속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권리 보장 목록이 매우 세부적이고,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며, 학생 일반의 삶과 관련된 권리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이 조례안처럼 권리 보장 항목을 나열한 체제는,

- * 해석의 논란을 피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 권리 항목이 학생의 삶 전반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 개정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리 항목의 구체성 수위가 일관되지 않으면 여전히 해석의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보완과 수정이 다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대체로 학생의 권리 항목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듯 보이고, 이에 몇 가지 수정,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언급해 보면

☞ ‘제9조 학습권’에서 ‘인문계/자연계’ 선택 강요에 대한 견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보장, 특별활동에서의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 또 ‘예체능 학생’이라는 범주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제10조 정규교과 외 학습 선택권’에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계획 수립에서부터 학생 참여나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야 만이 학습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사적 기록물 열람이 불가한 물품에 일기장, 개인수첩과 더불어 ‘휴대폰 기록’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성 및 동성) 교제’에 대한 규제가 없

어야 함을 명시화해야 합니다.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동성교제도)

☞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교복 자체에 ‘바느질된 이름표 착용’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동조 2항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학급별로 성적일람표를 회람시켜 성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조 1항과 4항은 그런 절차의 반인권성(타인이 성적을 열람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수의 학생들이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자신의 성적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 자치활동 내실화의 필수 조건인 ‘관련 예산 책정’과 ‘예산 집행 및 결산’ 등의 권한을 학생회에 부여해야(교사가 지도하더라도) 합니다.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에서 1항과 5항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편제상 5항이 1항의 내용을 보장 내용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제21조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토록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2조 교육환경권’에서 여학생에게 있어 통상 차별적인 화장실 숫자(개수) 등이 특별히 지적될 필요가 있습니다.(여학생 화장실은 대소변 공용이고 더 참기 어려움 고려)

☞ ‘제26조 징계절차에서의 권리’에서 ‘징계 공고 금지’, ‘인권적이고 교육적인 징계 및 생활지도 시스템 구축’, ‘인권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일반적인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을 ‘재학 중인 자’로 규정했을 경우, ‘휴학생’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재적 중인 자’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비인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훈련원’ 등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보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

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조례의 의결과정이나 적용시 학교 현장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보수적인 교육관'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예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례의 인권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을 새롭게 복원하는 제안과 지원이 함께 제시된다면 갈등을 다소나마 축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학교가 권위적이고 관습적인 생활지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생활교육기관으로서 각종 부적응, 이탈, 폭력 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바탕을 인권조례가 마련할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그러한 효과성을 검증한 현장의 실천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학교에 안내하고, 각종 연수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조례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해도 학교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그런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조항을 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은 교사들의 저항과 거부, 방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학생의 의도적이고 과도한 저항과 방해는 억압적 통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통제로 지도하기보다는 인권보장과 진정한 사랑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억압적 통제가 과도한 통제로 악화되면 다른 학생들까지 교사에게 반발하여 더 큰 문제로 비화합니다.

* 교원들은 교육을 학습지도에 국한하고 성적 올리기가 학교의 목표이며 책무로 생각하여 교육은 통제에서 시작된다고 믿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교육관의 저항을 고려하면서 상징적 조례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타협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제34조 1항의 '인권실천계획'의 해석이 자칫하면 '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항과 2항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권실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의적 해석과 실천'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도별 계획에 국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학생 인권 증진에

대한 비전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학교가 '학교별 인권실태 상황 평가'에 긴장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존 학교평가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관련 장학진이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입니다.

☞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견제 권한이 다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의 및 권고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일종의 인권적 필터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31조 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에서 연수 대상을 '교원'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제2조 3호에서 규정한 '교직원'의 범주를 교육행정직 모두를 포함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교직원 전반의 인권 감수성 신장을 위해서는 '신규교사 및 교육행정직 임용 직전연수', '각종 자격연수'시 인권 강좌를 배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참여위원회'와 학교의 '학생회'가 연동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듯합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학생 상호간 소통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자치적 역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화 시키는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의 운영방식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인력, 행·재정적 지원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하위 규정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이 조례의 가장 매력적인 기구들이고, 실행된다면 조례의 규범력으로서의 최선의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 '학생인권상담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상담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에게 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권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직무 권한입니다.(교권은 학생인권을 위한 권한)

* 따라서 이 조례는 교권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것이요, 교권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학생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고, 교사는 학생을 위한 존재입니다. 주인(학생)이 중심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권보다 학생 인권이 우선입니다.

* 학생들 중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당하고 보호받아야 할 교사나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제가 이 조례입니다

* 또한 이는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적 관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비교육적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오히려 매우 '교육적인 것'으로 학교를 채우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 학교가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억압적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인권을 기제로 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은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최소화한 가치입니다.

* 학교의 그러한 변화를 위해 인권조례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상기한 바와 같이 체벌이나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생활교육 연구 및 실천

☞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안 마련 및 강사단 구축

-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 학생 인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및 제시
- ☞ 학교급 및 학년에 맞는 수준별 인권교육 교재 및 교육안 마련
- ☞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요.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시요.

☞ * 빈곤층일수록 자녀들에 대한 체벌 비율이 높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학생의 정서·심리 및 생활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례가 교사-학생, 학생-학생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한 방법으로서 장기적 비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보장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좋겠습니다.

* ‘면학 분위기 훼손’이 진정 우려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정당한 수업(교육)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어서 그런 따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 우리 광주에서는 교사, 학생,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교육위원, 시의원 등이 함께 모여 지혜와 힘을 모아 여러 해 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보수적 교육관을 가진 교육계 상층부와 보수적 여론 주도층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관(교육청) 주도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부럽고 감사하면서 크게 기대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역사적인 작업으로 경기도에서 제정이 된다면 도미노처럼 여러 지역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고에 대한 치하와 더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정정훈	소속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아래의 내용과 중복되지만, 조례 초안의 권리 목록은 권리 실현에 취약한 특정 범주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이러한 내용은 조례 초안의 제9조(특히 같은 조 제3항) 및 제21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안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 관점을 선언하고, 복지에산상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의 규정 방식은 특정 범주 학생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근 보다는 일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적 관점을 선언하는 일반적 접근방식만으로는 구체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한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중 하나가 미

등록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취학연령대(7~18살) 외국인 아동이 8,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²⁾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거주사실 증명만으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입학 절차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거나, 초등학교 전입학이 학교장에 의하여 거부되는 사례, 교육과정 종료시에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에 별도의 조문 또는 항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국내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고, 해당 초·중등학교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 범주 학생들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초안(제9조제3항)의 방식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시급한 특정 범주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권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과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령 조례초안이 학생 인권의 모든 문제를 망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허용하는 구체적 규정과 선수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이라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문제 사이에 조례 초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겨레, 2007. 12. 6.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 입학 가능”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6.12, 2008.2.22>

☞ 차별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자유 등과 관련한 조례 초안의 규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학생들이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학교 교문에서 멈추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입니다.³⁾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교실이나 기숙사 및 기타 어떠한 장소에서도, ①학교 운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②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Tinker test**)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모든 정치적 상징물이나 논쟁적 물건을 휴대하는 것도 금지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학생들을 완벽한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규제나 보복 없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너무나 당연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왔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규제와 억압이 오히려 반교육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조례 초안은 이러한 사회적 반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발 길이 제한, 집회의 자유, 휴대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할 어떠한 합리적·교육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와 제한은 학생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훼손하는 반교육적 억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례 초안은 위팅커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교육적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령 두발의 길이를 제외한 용모와 복장, 수업 시간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집회 제한,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 학칙 등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실천계획수립

3)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1969)
아이오와 주 Des Moines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5세의 John. Tinker와 16세의 Christopher Eckhardt는 1965년 베트남 전쟁에 대한 거부와 휴전의 지지를 알리기 위해 검은 완장을 차고 학교에 등교하였고, 학교 당국은 이를 문제삼아 원고들에게 정학처분이라는 징계를 한 사건에 대한 판결.

조례 초안의 규정들은 상당수가 인권증진의 기본정신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보장의 내용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의 실질적 실천력은 실천계획(제34조)의 수립과 추진·평가 체계의 확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례 초안의 제34조는 실천계획의 작성 주기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인권실태조사(제33조)는 매년, 학교별 학교인권상황 평가(제37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천계획의 작성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기적 실천계획 수립만으로는 경기도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실행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기본계획(ex, 5년)-연도별실천계획-추진실적 점검체계를** 수립해서 구체적 실행을 확보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학생회, 어린이회와 같은 학생 자치기구의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교육철학이 변화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학생인권옹호관

- 1) 제39조제1항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제도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학생인권옹호관이 독립 기관인지 여부, 독립기관이 아니라면 경기도 교육감 소속 등으로 그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는

- 2) 제27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제45조제1항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침해’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인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령 학생들 사이의 폭행, 욕설, 금전 갈취, 집단 괴롭힘 등의 경우, 어디까지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구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인권 침해 전부를 인권옹호관의 업무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한된 인원 구성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권옹호관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조례 초안의 관련 규정은 학생인권옹호관 개인을 개별적·독립적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상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이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의 의사결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시정권고 및 제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데(제41조), 시정권고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 권고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인권옹호관이 개별적 독립기구로서 시정권고와 제도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역별로 동일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시정권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도개선권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4) 구성(제40조)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교수)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벌, 강제 이발과 같은 잘못된 관행에 기댄 지도 방식을 정당한 ‘교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권을 몽둥이와 회초리로 지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권의 가치에 근거한 ‘다른 지도’와 ‘교육’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교권’과 교육 방식이 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성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들의 행위가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조례 초안의 정신이고, 우리들의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교권을 위협한다는 것은 잘못된 문제 설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표준 학칙 제정 및 제시, 현재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선수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구체적인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준 제시.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인권침해입니다. 가령 집단 따돌림과 같은 가장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학교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기당 2시간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은 ‘관계’의 문제이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과정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가치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일이 커다란 진통을 겪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교육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며, 조례 초안은 그 중요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소중한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조례 초안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제평섭	소속 : 남양주 와부초등학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부합함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교복치마길이도 두발길이처럼 규제하진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음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특별히 보완 수정 될 부분은 없으며 조례 차원에서 담을 수 있는 차별금지 대원칙이 잘 살려져 있음.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두발길이 및 휴대폰 소지, 체벌금지에 대한 사항은 암묵적으로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혼란을 초래할것 같지 않음.

다만 수업시간외의 학내 집회의 자유 부분은 교사,학부모 등 우리 사회 기성세대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척결하지 않는 한 약간의 논란을 가져 올수 있음.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강제성이 없는 한 조례초안 수준에서 적절하게 항목들이 담겨 있음.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 참여가 실질화 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충분함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학생지도를 통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반교육적일수 있으나 올바른 사제문화가 정착된다면 학생인권은 그들이 누려야 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교사는 결코 아이들을 강제로 통

제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것! 바로 이것이 교육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초등의 경우,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상주해야겠음. 학교현장과 가정에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되고 있는 각종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담교사와 대화하는 사이 몸에 베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제10조(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에서 정규교과(이과,문과,예체능과)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친후 정규교과 편성시 반영했으면 함.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학생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일원임이 너무도 당연한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던 그들을 자기 권리에 눈뜨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익히게끔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최 윤진	소속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 비교적 충실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여짐.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 인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각 영역별 인권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자유권(표현, 양심 및 사상, 집회 및 결사, 사생활의 자유 등)
- 복지권(교육권, 소외계층 학생 지원, 위생 및 환경 개선 등)
- 보호권(폭력,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 참여권(교내 및 교외 활동에의 참여, 사이버 참여 등)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

- 학업 성적에 따른 차별 금지(우열반 편성의 악용 사례나 성적 기준으로 학급이나 학생회장 선출이나 선호 단체 가입 등의 특혜 사례 등의 차별 금지)
-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맞벌이 빈곤 가정 출신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등 특별교육과정 설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 함.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사안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생에게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었고, 선진 외국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위의 권리들이 대부분 보장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조례에 포함되어 앞으로 보장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단, 학생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타인이나 학업수행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 - 인권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교과 교육과 교과외 교육, 초중고의 교급별 교육, 학생의 집단별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 등.

- 학생 인권심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명시하여 보완 필요.

- 학교 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서 포상 및 시정 권고 절차 등.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방안들도 나름대로 학생 참여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이지만 더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개별적 의견 개진 창구의 마련, 학생들의 자율동아리들의 사회봉사활동이나 시민 참여활동 지원 등 학생 주도의 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지위, 권한 등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조례상의 내용처럼 학생 권리 침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임. 또한 조례 45조에는 학생 누구나 인권 옹호관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구제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한 추후 피해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현재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상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태를 참고하여야 할 것임.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고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 학생 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 되어 상충되는 권리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진정한 교권의 구현은 학생권의 보장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든지 불합리하게 제한해야만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또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참다운 교육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J. Dewey는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학교 안에서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험이 결국 큰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민주적 학교라 함은 일차적으로 학생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 한다 함은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을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이 권리와 책임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 ☞ -교사교육 과정에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을 함양 시킬 수 교육과정 설치
 - 교사 선발 및 평가 제도에 있어서 학생인권 침해 없이 학생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학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나 처벌 등은 별도의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교사들이 수업 지도에 열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면 미국의 중고교의 경우, 학생의 지각이나 출결석 관련해서는 학교 행정 실이 관할해서 학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학생들의 진로나 학업계획은 카운슬러들이 담당하고, 학교 내 폭력, 마약, 절도 등의 사안은 학교 내 경비나 경찰들이 신속하게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교사는 해당 교과목의 전문가로서의 능력 개발에 몰두할 수 있음.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 ☞ 학생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때 그 개념이나 내용이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면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침해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행동의 허용 범위들을 판별해 나갈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 ☞ 금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의 내용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담고 있고,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른 한 편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귀 기울여서 보완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해 가야겠지만, 학교가 좀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학생이 좀 더 자율적 구성원으로 즐겁게 학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금번 조례안이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의견서

작성자 이름 : 허종렬	소속 : 서울교육대학교
--------------	--------------

[학생인권 목록 분야]

1. 조례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까?



내용 전반을 읽어 보았습니다.
부합니다.

2. 조례 초안은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3가지 범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생 권리의 목록 중 보완, 수정,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자유와 참여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선택권**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인정되는 선택권이 초등학교부터 인정되어야 함.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사유를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 학교행사로 인한 학습권침해’라고만 하여 사정 변경에 의한 갑작스러운 학교 행사까지 제한할 수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음.
양자를 절충하여 학교 행사로 인한 수업결손 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혹은 사후 보고제를 통하여 절차적 통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조례 초안은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권리 실현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복지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초안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정책이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이들에 대한 예산의 우선적 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4.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 길이 자유 △휴대폰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권리들이 보장될 경우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벌 금지 : 금지할 필요가 있음. 체벌을 허용하는 한 대체 수단의 강구에 소홀함. 학생들을 훈육할 필요가 있으나 체벌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함(필자의 문화일보 기사 참조).

△두발 길이 자유 : 솔직하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짧은 머리이며, 학교에서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 그러나 교육적으로 머리를 강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엔 확신이 서지 않음. 규제를 풀고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외국의 경우 학교선택권을 전제로 짧은 머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 교육적인 취지에 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단순히 그런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머리 단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보다 왜 그런 명문 사학들이 머리를 단속하는가,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가 하는 점은 연구를 해볼 사안이라고 봄.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 비록 학교선택권이 제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봄.

△일기장 검사와 휴대폰 소지 허용 : 초등학교의 경우 일기장 검사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를 인정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것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님(필자의 서울교대 학보 시론 참조).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조례안과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휴대폰 소지는 조례안과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임.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 수업시간 외의 평화적 집회라도 교장과 담당 교사의 지도 하에 하는 것이 교육적임.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 :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독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 교장과 담당 교사의 지도 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생인권 증진 분야]

5.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별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사안임. 그러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대안으로는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칭을 수정하여 학생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 여기에서 인권심의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임.

6. 조례안 초안은 학생의 참여가 증진될 때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목록 가운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참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 학생과 관련된 기관 혹은 조직에 학생이 업저버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위의 학생소청심의회를 만드는 경우 거기에 학생이 업저버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권리구제기구 분야]

7. 조례 초안은 학생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등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합니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역시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들의 불필요한 반대를 초래할 것임. 위의 학생소청심의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 :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그러나 관련 사안을 지역 교육청의 상담실에 제기하기 전에 우선 학내에서 다루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권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8. 조례 초안은 학생인권이 교육의 시작이자 바탕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조례 초안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교사의 학생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교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쟁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인권교사들과 포럼 등에서 만나 같이 얘기를 해보니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무분별한 인권 주장을 하여 곤혹스러움을 겪은 적이 있으며, 학급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일부 차별 등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조례안처럼 인권상담실 혹은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내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인 접근을 소홀히 하고 바로 교외로 문제를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

교육의 효과는 첫째가 학생이 교사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임.

교사들이 인권의식과 소양이 미흡하다면 그들에게 인권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인권에 민감하도록 계도할 필요는 있으나, 학생들이 교사들과 대치하게 만드는 제도나 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9.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으려면, 조례 제정과 함께 기타 보완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시오.

예: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과 교사 연수



학생인권 침해의 상황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과밀학급, 교육과정상의 학습량의 과다 등에 비롯된 점과 학교의 권위적 풍토, 일부 교사들의 미흡한 인권의식 등에서 비롯되는 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들어주며, 사범대학과 교대 등도 교직양성과정과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0.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좀더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 면학 분위기 훼손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조례 내용이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사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학교와 사회의 학교성적과 학벌에 의한 인간 차별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이것은 중고등학교로 하여금 대학입시 성적에 학교 위상의 전부를 걸게 만드는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가 학벌보다는 그 분야에 적합한 실질적인 능력과 특기를 중시하는 풍토를 계속 만들어가야 할 것임.

11. 조례안에 대한 총평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양자가 서로 일치하는 면이 많고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을 자문해봐야 할 것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다른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함. 즉 교사들은 원론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편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임.